

노동계 판도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 2,8

봄철 임금교섭을 앞두고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노총과는 계열을 달리하는 노조와 '법외' 노동단체들의 실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정책전환의 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사관계의 안정이나 노동법 개정 등 주요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비노총 계열 노조의 정책건의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 노조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다. 노동계의 전체 판도가 크게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시행돼온 정책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 내부에서는 조직적인 큰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가히 격변에 가까운 정도였다. 노조의 수는 87년 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조직노동자의 수는 2배 정도 증가했다. 이와 함께 미조직 부문들이 조직화되면서 새로운 부문의 노조운동이 형성되었다. 언론, 병원, 건설, 사무, 연구·전문, 대학, 경제단체 등이 그것이다. 한편 신규 노조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그것이 모여 전국조직을 만들게 된다.

90년 1월 출범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는 제조업 노조 중심의 지역협의체가 결성한 전국조직이었다. 한편 산업별로는 언론, 병원, 사무·금융, 전문·기술, 건설, 대학에 속한 노조들이 '법외' 연맹들을 발족시키게 되었고, 이들 6개 연맹은 93년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합법화되었다. 비제조업 중심의 이 연맹들은 다른 부문 협의체와 함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를 조직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노협과 업종회의가 주

축이 되고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과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가 결합하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지난 1월30일 전국조선노동조합협의회(조선노협)가 발족했다.

이들 노조조직은 한국노총 계열과는 별도의 노동단체로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조' 진영의 형성은 한국노총의 자주성·민주성·대표성 상실에 그 배경을 두고 있으며,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이아말로 전체 노동운동의 재편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노총이 지난해 경총과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앙 노사단체와 임금합의를 서두르고 있어 산하 노조 조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업종에 따라 조직적 이탈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가 말 잘듣는 노총만을 끼고 돌면서 '민주노조' 진영을 배척하는 자세로 일관해온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 처사였음이 분명하다. 전노대 산하 6개 합법연맹은 물론이고, '법외' 노동단체들도 한결같이 합법성을 지닌 단위노조들로 구성된 조직이고 보면, 이들 조직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노조조직의 판도와 지위가 이러하는데도 '민주노조'들이 벌이는 연대활동에 대해 정부가 '제3자 개입금지'의 무던 칼을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적이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짓이다.

한국노총과 계열을 달리하는 모든 노조들도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복수노조 금지 따위의 '악법' 규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만 한다.